

3. 이번 사건은 국군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또다시 폭압적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

이는 연행자 중의 상당수가 방위병이나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며, 특히 송재봉씨의 경우 입대하자마자 아무런 군법위반 혐의없이 기무사에 의해 구속되었고, 여타 군복무자들도 현재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작년의 일을 상기할 때, 다시금 자행되는 기무사의 정치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우리는 검, 경의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며, 그럼에도 공안기관이 조작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것을 전면부정할 것이다.

또한 그 근거가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을 수단으로 도출된 어쩔 수 없는 허위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행자들의 평소의 애국적 삶과 양심을 신뢰할 뿐이다.

5. 우리는 청주대 학생운동에 가해지고 있는 일련의 탄압상황이 강경대열사 살인사건 이후 현정권이 위기에 닥치자 제반 이데올로기 공세와 폭압기구를 이용하여 민주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책동이라 판단하며, 특히 최근 조작 발표된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사건'이나 전대협에 대한 '정책위 수사'와 맥을 같이 하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단정한다.

우리는 지역 및 전국차원의 민주세력과 광범하게 연대하여 이번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파헤쳐 순수하고도 애국적인 학생운동을 보위하고 반인륜적 조작사건을 피하는 노태우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여 공안통치를 종식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1년 6월 12일

충북지구대학생대표자협의회
청주대학교총학생회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인권선교협의회

1. 지난 6월 11일부터 발생한 경악할 청주대 이적단체 구성조작 사태에 대하여 충북인권선교협의회는 6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즉각적인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4단계는 기자회견에서 이사건은 공안기관에 의한 조작 음모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럼에도 공안기관이 조작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것을 전면 부정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 경, 기무사는 연행자 12명 중 5명을 구속, 1명을 입건하였으며, 군복무자 5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2.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조작임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폭로한다.

1)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검, 경의 각본이 짜여져 있었음은 이 사건이 날조극임을 반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만일 이것이 날조가 아니라 5월 22일 기무사로부터 구속된 송재봉군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변호사도 없고 5월 31일까지 가족의 면회조차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진술의 임의성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자신있는 해명을 해야한다. 더우기 공안기관이 수없는 밀실, 고문수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했던 과거행적을 상기할때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 청주대에는 '자주대오'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조직체계, 강령, 규약과 기관지 '자주언론' 역시 전면 허구이다. 연행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사진은 자신들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송재봉군의 진술이라는 것을 들이대며 지속되는 협박과 잠 안재우기 고문으로 인정을 강요하였고 연행자들은 이러한 극한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다. 따라서 검, 경이 주장한 상기 근거들은 그 사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송재봉군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연행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꾸며진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3) 「민주선언」에 대해 검, 경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그간 발행된 「민주선언」을 분석 검토할 때 우리는 87-88년도에 제작된 「민주선언」은 반독재 민주화의 염원을 담았을 뿐, 소위 이적성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평범한 대학 출판물임을 확신한다. (증거물 참조)

4) 검, 경은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에 강령, 조직관리 지침을 담아 학습해 왔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검, 경의 발표와는 달리 91년도 총학생회, 단대, 과학생회 등 합법적 학생조직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 제안서임이 밝혀졌다. (증거물 참조)

5) 우리는 검, 경이 제시한 암호해독문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소위 암호해독문의 정체는 지난 6월 초 청대생 최영환(신방과87)군의 가택을 경찰이 수색했을 때 최근의 일기장에 끼어있던 껌 포장지 3장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자음, 모음과 알파벳의 조합으로 구성)였음이 최영환군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 '암호해독문'이야말로 순수한

학생운동을 국민대중과 괴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용공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조작한 가장 음험하고, 유치한 수작에 불과하다.

3. 우리는 이러한 조작의 근거를 밝힘과 동시에 검,경의 파렴치한 부도덕성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무엇이 그리 아쉽다고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지들과 출소한 지 채 한달도 안되는 동지들을 앓아 간단 말인가?

무엇이 그리 두렵다고 지나간 수 년전의 학생활동을 조작 포장하여 이미 학생운동을 정리한 동지들을 다시금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단 말인가?

4. 우리는 외대사건을 빌미 삼아 민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극도로 파렴치하고부도덕한 이번 사건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운동의 선봉 전대협을 끝끝내 사수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 가해지는 민주운동 탄압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6-15 '청주대 이적단체 조작 규탄과 민주운동탄압 분쇄 결의대회'와 구속자 면회투쟁 등 각종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조작사실에 대한 끈질긴 폭로와 여론형성을 통해 청주대 이적단체 조작음모를 기필코 분쇄해내고야 말것이다.

1991. 6. 15

충북지구대학생대표자협의회
청주대학교총학생회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인권선교협의회

”구속된 군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전대협 성명서

민주의 새날을 열어나가는 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5월 투쟁을 전개하였던 자랑스런 충북대협 4만 학도에게 힘찬 연대투쟁의 인사를 보낸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은 지난 6월 11일 발생한 청주대 이적단체조작사건은 노태우정권의 비열한 애국학생에 대한 탄압으로 이를 준열히 규탄한다.

청주대 이적단체조작사건은 이미 충북지역 제 민주단체에서 발표한 것 같이 조작날조된 음흉한 독재우리의 간계임을 적시하고 이를 4만학도의 분노와 백만학도의 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현재 노태우정권은 강경대일사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되짚지 않고 오히려 강경탄압으로 전대협 와해와 백만학도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노태우정권당도의 민주정부수립 투쟁으로 일어난 우리 청년학도에 대해 자신의 동시구조에 위기를 느낀 악자의 허세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조국의 자랑 4만 청년학도여, 식민지 조국의 하늘은 암울하난 청년학도의 가슴은 언제나 푸르기에 조국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제아무리 독재 오리배들이 정의로운 청년학도의 투쟁을 가로막을지라도 전대협의 백만학도는 이를 뚫고 민주정부수립을 기어이 이루어 낼 것이다.

노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청주대 이적단체조작사건에 의연히 맞서고 있는 4만 학도에게 진정으로 전국의 백만학도를 대신해 격려와 지지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현재의 모든 탄압책동은 공안동치로 근근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안동치를 분쇄하고 민주정부수립을 백만학도의 사활적 의지로 내걸고 힘차게 승리의 그날까지 싸워 나가자.

4만학도의 영예로운 민족해방투쟁은 백만학도의 가슴에 살아 꿈틀거리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을 지켜내고 자주, 민주, 통일 위업을 이룩할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 진군 47년 6월 16일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충북지구대학생대표자협의회
32명
청주대학교총학생회
10명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충북인권선교협의회

6.28일자
한성익

清州大출신 「자주대오」사건 관련

軍人 5명 拘束중

국군기무사

국군기무사 동료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자주대오」출신 5명
이들 중 3명은 국군기무사
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행위 혐의로 구속중

국군기무사 동료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행위 혐의로 구속중



국군기무사 동료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행위 혐의로 구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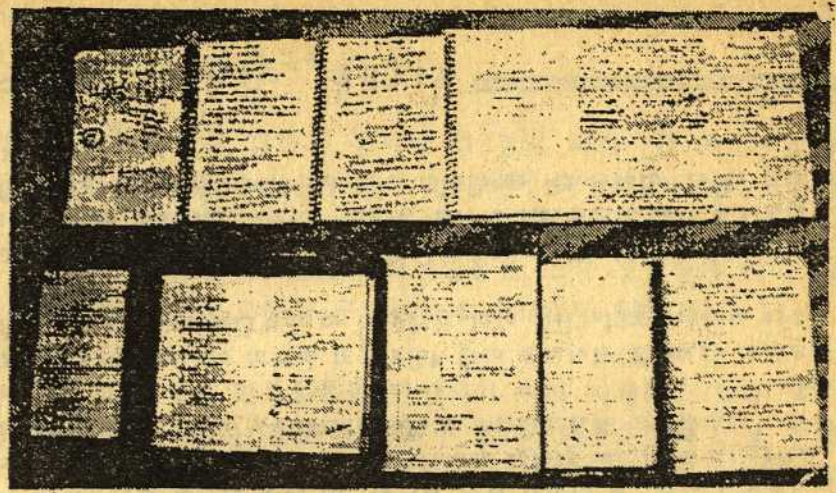
충청남도
8월 16일
(화)

국군기무사 동료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행위 혐의로 구속중

「자주대오」軍人 5명 拘束

국군기무사 동료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관련자 15명 수배
국군기무사 동료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행위 혐의로 구속중



주체사상등 선전행위 혐의로 구속중

6. 28일자
공화애인

국군기무사 동료사병에 주체사상등 선전
행위 혐의로 구속중

기무사 녹화사업 '부활' 의혹

'청주대 자주대오사건' 조작 논란

지난 13일 충북도경이 발표한 이른바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 가족과 청주대 총학생회·재야단체가 "사건이 조작됐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재판과정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건은 군복무중인 송재봉(25·정의 줄)씨가 입대 전 학생운동경력 때문에 국군기

주언론)은 가짜라고 거듭 주장했다.

총학생회 등은 그 근거로 경찰이 조작관라지침 등을 담아 학습해왔다고 발표한 컴퓨터 스킷 내용이 지난 5월말계 총학생회에서 단체·과학생회 등 학생조직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토론제안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등 10여명은 14일 백씨 등과 면회한 결과 "백씨가 '이미 시나리오 다 짜져 있었고 경찰 조사는 꿰어맞추기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자주대오'라는 조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경 정해섭 대공과장은 이에 대해 "송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구타 등 가혹행위없이 모두 자유롭게 진술했다"며 "조작은 있을 수도

수감자 "시나리오 짜있었다" 주장

무사령부(기무사)에 연행돼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총학생회에서 일했던 송씨의 선후배들에게까지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무사의 5공 때 '녹화사업' 악령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 등 4개 단체는 15일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2번째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대에 '자주대오'라는 조직은 있지 않으며 경찰발표에서 제시한 조직체계·강령·규약과 기관지 <자

또 경찰이 제시한 암호해독문은 수배된 최영환(23·신방 4)씨가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에게 보내려고 검토장지 3장에 두 사람만의 약속된 형식(자음·모음과 알파벳 조합으로 구성)으로 써놓은 것을 경찰이 최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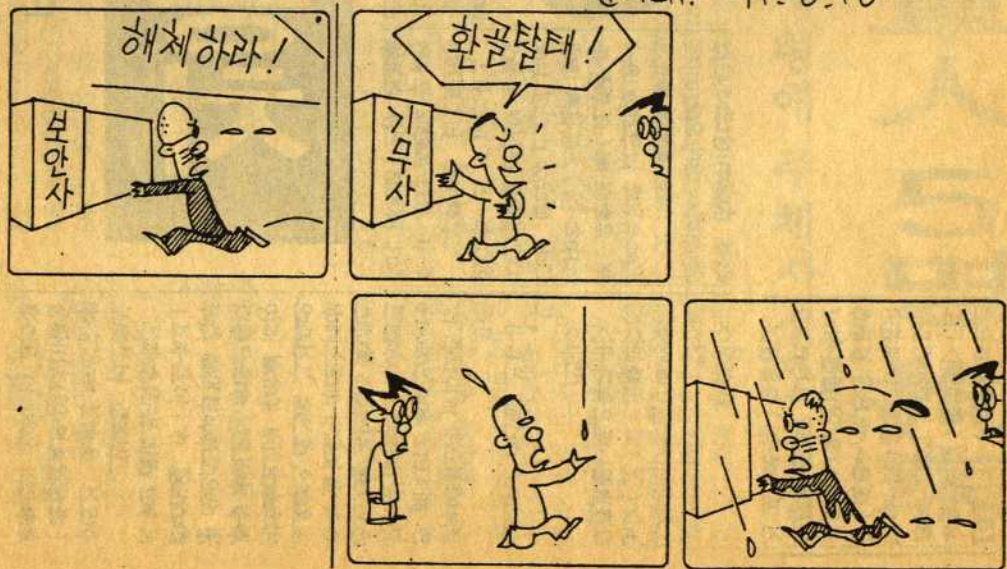
청주 서부경찰서에 수감중인 백상진(24·신방 4 제적)씨의 어머니(50)와 장준태(23·지역개발)씨의 약혼자 심선미(25)씨, 동료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문체의 암호해독문에 대해 수배된 최씨를 붙잡아야 총학생회쪽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청주에는 치안본부, 한기부, 기무사 수사관들이 서울에서 대거 내려와 관련자들의 조사와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진재학 기자>

한겨레. 91.6.16



청대 '자주대오' 검거시엔, 군복무자·출소 1개월 안된 사람 대부분 "치밀한 사전작업이다"

경찰이 청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12명에 대해 '자주대오' 비밀조직의 구성활동 혐의로 전격 연행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 구속한지, 충북지구 대학생대표 자담의회, 청주대 총학생회, 충민련, 충북인권선교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청주대에서 각각 경찰의 연행·구속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기관에 의한 이적단체 구성 조작 및 남정총리서리 폭행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되고 재야 및 학생 운동권에 대한 진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경찰의 조처를 두고 재야 및 학생 등이 '치밀하게 짜여진 사전 각본에 의한 남정총리서리 폭행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친인공도 함 공적적 탄압 확대'를 주장했다.

4개 단체는 이어서 '남정'의 증거로 △수사 이전의 이미 검거의 사전각본이 짜여졌다는 점

△청주대에는 '자주대오'라는 이름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김 소진·경이 말하는 '자주대오'인 청대 학생 운동사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민주선언'은 87~88년에 제작된 것으로 반독재 민주회의 연원을 담았을 뿐 이적단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범한 출판물인 '청 3년 행기' 가운데는 학생운동에서 상 당기간 유리되었던 군복무자와, 고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되는 졸업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이들을 연행하기 전부터 총학생회·연락사무국 조직 등, 교육국 등으로 구성된 '자주대오'의 조직표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새벽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인공의 (출연생)씨에 의하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주대오의 틀에 맞추려 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씨는 '자주대오'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과경

청주신문 91년 6월 16일 (금)

4)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구속 사건

사건경과 (1991. 6. 27 - 7. 10)

6월 27일 (목)

: 본 연구소 연구원 신현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경기대 및 한신대 <예정>강사), 권현정(서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이창휘(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현재 육군 방위병 복무중), 송주명(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현재 육군 방위병 복무중), 한 준(서울대 사회학과 석사졸업, 현재 육군 방위병 복무중), 홍성태(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현재 육군 방위병 복무중) 등 6인의 연구원이 치안본부와 국군기무사에 의해 연행됨(임의동행 아닌 강제연행임). 한편 연행된 6인의 연구원의 자택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

20시 30분 경 본 연구소 사무실에 치안본부 소속 수사관 20여명이 본 연구소 신현준 연구원 앞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세미나자료 다수 및 재정-운영관계 자료 일체(3-4박스 분량), 퍼스널 컴퓨터(AT286) 장비 일체를 수색-압수.

한편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연구원 지만수, 안상훈(연구소 내에서), 송평수(집앞에서) 연구원 등이 강제연행 또는 임의 동행.

6월 28일(금)

: 신현준, 권현정 연구원의 가족들과 본 연구소 연구 기획위원들(김세균, 서관모, 윤소영 교수)이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3부를 방문하여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송주명 연구원의 가족들은 기무사에 연행-구속된 사실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확인받지 못함. 18시 30분에 본 연구소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본 연구소의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

6월 29일(토)

: 00시 40분 송평수, 지만수, 안상훈 연구원 귀가 조치.

신현준, 권현정 연구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결정, 기무사에 연행되었던 이창휘, 송주명, 한준, 홍성태 연구원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오전 11시 기자회견. 구속자 가족들과 본 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균, 김수행, 윤소영 교수 등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성명서 발표(별첨 성명서 참고).

송주명, 이창휘 연구원의 가족들, 김수행 교수, 허석렬 교수, 본 연구소 연구원들 기무사 재차 방문, 연구원들의 연행-구속 사실을 확인, 아울러 본 연구소 연구원 한준(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현재 육군 방위병 복무중),

홍성태(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현재 육군 방위병 복무중) 2인의 연행-구속 사실도 확인 신현준, 권현정 연구원이 가족들과 연구원들이 치안본부를 방문하여 신현준 연구원은 종로경찰서에, 권현정 연구원은 서대문 경찰서에 각각 분리 구속 수감되었음을 확인. 면회신청하였으나 면회시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7월 1일(월) 치본 또는 치본책임자 입회하에 해당 경찰서에서 면회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음.

6월 30일(일)

: 10시 30분 『학문과 사상의 자유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 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결성. 공대위 공동대표는 최장집(고려대 정치학과), 하일민(부산대 철학과) 교수. 참가단체는 학단협 산하 15개 단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조협의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서울대대학원자치회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출판노조 협의회, 서울사회과학연구소 등 25개.

7월 1일(월)

: 연행-구속된 연구원 가족, 본 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본 연구소 연구원들 치본과 기무사 방문. 신현준 연구원, 권현정 연구원 면회. 장지동 특전사 영창에 항의방문. 국방부장관에게 면담신청서 접수. 공대위 소속 각 단체별로 서명작업 착수.

7월 2일(화)

: 오전 9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대위의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별첨 성명서 참조). 이후 공대위측에서 기무사에 50여명이 찾아가 항의방문. 장지동 특전사영창에 항의방문.

7월 3일(수)

: 국방부 헌병대 방문. 구속영장의 혐의사실 확인(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7월 6일(토) 기무사에 구속된 4명의 면회(가족 및 친지) 약속받음. 신민당에서 학술연구자 구속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 발표(별첨 성명서 참조) 치본 대공3과에서 압수한 물품을 돌려받음.

7월 4일(목)

: 기무사 구속자 가족 백승헌 변호사와 면담. 법무장관, 국무회의에서 학위논문을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발언.

7월 5일(금)

: 『법무장관의 국무회의 발언 및 치안본부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박자료』 발간 및 배포.
『6.27 학문과 사상의 자유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 구속사태 관계자료집 (1)』 발간, 배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간담회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례교수회의에서 학위 논문 및 기타 학술논문 저서를 문제삼는 것은 연구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 각 일간지에서 정부 처사의 부당성을 지적.

7월 6일(토)

: 구속자 가족 국방부 헌병대로 기무사 구속자 면회.
공대위 측에선 헌병대 앞에서 항의 시위.

7월 8일 (월)

: 서울대 대학원생 '대학원생 불법구속 규탄 및 학문사상의 자유쟁취를 위한 대학원생 결의대회'를 갖고 『교수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신민당 서사연 관계 조사단 구성(위원장 김원기 의원 외 정대철, 조순승, 이수인, 박석무 의원 등 포함).

7월 9일 (화)

: 임시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류준상(신민당), 이수인(신민당), 조만후(민자당)의원이 본 사건 관계로 질문하고 총리가 답변(MBC 밤 9시 뉴스 보도).

임시국회 본회의 사회 -문화분야 (7.12), 임시국회 국방-문공상임위원회 (7.15 이후)에서 각당 의원들 서사연 관계 대정부 질문 예정.

구속자 인적 상황

성명	나이(만)	학 력	기 타
이창휘	28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육군본부 참모부 단기사병 복무중
송주명	28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육군 방위병 복무중
한 준	26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졸업	서초동 정보사 단기사병 복무중
홍성태	26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육군사관학교 단기사병 복무중
신현준	29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경기대 강사
권현정	26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송주명씨와 한준씨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입대. 이창휘씨와 홍성태씨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모태가 된 상도연구실의 회원으로 있다가 입대. 신현준씨와 권현정씨는 현재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중.

***가족 연락처**

이창휘 정나원 (부인) 813-3137
송주명 송혜숙 (누나) 888-7840
홍성태 413-5524

***변호인**

백승헌 593-5041~3
박성호 522-0581~4

언론보도 내용요약(6월 30일-7월 3일)

1)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공안당국의 간섭 탄압을 비판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학술연구단체에서 이미 오래전에 출판한 도서를 문제삼아 그 집필자들(일부)을 구속한 것은 학문 출판에 대한 공안당국 부당한 간섭 탄압이라는 요지. 이와 관련 학문연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의 간섭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 국가보안법 개정후 그의 무분별한 확대적용의 첫 사례라는 지적. (한겨레 6/30 보도 및 해설 기사, 동아일보 7/1 보도기사, 동아일보 7/2 해설기사, 중앙일보 7/2 해설기사, 한겨레 7/2사설, 한겨레 7/2 해설기사, 한겨레 7/2광고문, 조선일보 7/3해설기사, 한국일보 7/3해설기사, 한겨레 7/3김한주 변호사 기고문)

2) 이미 통과된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안된다는 지적
구속자들의 혐의 사실 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각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각자의 학위논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 특히 신현준, 이창휘, 송주명씨의 '혐의사실'과 관련됨.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사회학회'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회의 등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 (한겨레 6/30 해설기사, 동아일보 7/2 해설기사, 한겨레 7/2사설, 한겨레 7/2해설기사, 조선일보 7/3 해설기사, 한국일보 7/3 해설기사)

3)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민의 국방의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국군기무사령부에 구속되어 현재까지(7월 3일 오전) 면회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4인의 연구원의 경우, 문제된다는 글이 군입대 이전에 집필된 것일 뿐만아니라 대학신문 등 합법적인 출판물에 게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 신분이 군인(방위병)이라는 것을 빌미로 기무사에서 밀실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군내부의 기무만을 담당해야할 기무사령부가

국방의 의무를 학문사상에 대한 탄압에 악용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지적, 특히 이번에 기무사에 구속된 4인 중 이창휘는 제대 2일전, 홍성태 제대 4일전에 각각 구속되었고 이들은 이미 7월 2일까지는 소집해제될 사람들이었음. 이와 같은 기무사의 민간개입과 밀실수사가 '인권탄압'이라는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한겨레 6/30 보도기사, 중앙일보 7/1 보도기사, 동아일보 7/2 보도기사, 한겨레 7/2 사설, 그밖에 7월 2일 공대위,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기무사 항의방문에 관한 각 일간지의 보도기사)

4)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에 편승한 실적 경쟁식의 사건이라는 지적

광역선거의 여당 승리등 최근의 정치적 분위기 변화에 공안당국이 편승하여 한 달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 적용함으로써 차제에 민주화운동이나 진보적 학계에 쇄기를 박아 두겠다는 반민주적인 의도가 섞여 있다는 지적. (한겨레 7/2사설, 동아일보 7/2 해설기사, 한겨레 7/3 김한주 변호사 기고문)

(7월 4일 -7월 6일)

1) 학문활동에 대해 공안당국이 실정법(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

학문활동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학계 자체와 시민사회의 자생력에 맡겨야 한다는 요지. 특히 대학원과정의 연구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교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문제에 대한 서울대 교수들의 움직임 보도). 최근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이제까지 문제삼지 않던 학술연구논문들을 사법처리한 것은 향후 국가보안법의 적용문제와 관련 우려할만한 사항이라는 지적.

(조선 7/4 사설, 동아 7/4인터부 기사, 한겨레 7/6보도기사, 조선 7/6 해설기사)

2) 이번에 문제가 된 논문들은 석사학위논문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학계의 정상적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지적.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김기춘 법무장관의 발언(조선 7/5보도기사)이 나온 이후, 문제가 된 논문들의 성격에 대한 보도. 문제가 된 단행본이나 논문들은 석사학위논문이거나 또는 그것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므로 이는 학계의 정상적 연구활동이며, 제도권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요지. 이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교권침해라는 지적. 이에 대한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대응 움직임에 대한 보도.

(중앙 7/5 보도기사, 한겨레 7/6 보도기사, 한겨레 7/6 해설기사, 조선 7/6보도기사, 한국 7/6보도기사)

3) 학문활동과 출판활동에 대한 탄압은 6공식 민주화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공안통치의 일환이라는 지적

보안기구가 학문활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6공식 민주화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전근대적 처사이며, 이제까지 출판활동 탄압이 '강성정국'의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사태라는 요지. 더욱이 구속자들이 운동권과 관련이 없으며, 석사학위논문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태이며 앞으로 학문 출판활동에 대한 탄압이 우려된다는 지적.

(동아 7/4 해설기사, 동아7/4 인터뷰기사)

(7.7-7.10)

7월 7일 에서 7월 10일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는 독자투고 각 일간지에 실리기 시작했고, 국회의 대정부 질의가 시작됨에 따라 국회의 질의 답변내용이 주로 보도 되었다. 또한 「체적 맞은 '학문, 사상의 자유」라는 제하의 『시사저널』의 해설 기사를 필두로 하여 각 주간지, 월간지들의 심층취재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1) '서사연 사건'과 관련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는 독자투고 학문적인 토론의 내용과 논문을 문제삼아 연구원을 구속하는 것은 명백히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학문연구에 대한 탄압이라는 지적. 학문영역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러한 일이 북방정책과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는 6공 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데 대한 개탄.

(조선 7/7 독자투고, 중앙 7/8 독자의 광장)

2)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및 총리답변 내용 보도
자세한 내용분석은 본 『자료집』 III「4.155회 임시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총리답변 분석」을 참조하시오. (중앙일보 7/9국회 본회의 지상 중계 한겨레 7/10 머릿기사, 중앙일보 7/10 정치면 초점해설)

3) 서사연 사건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신민당 당무위원회가 '서사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는 사실과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항의 집회 보도. (중앙 7/8 한겨레 7/9 동아 7/9)

공동 대책위원회의 기본 입장과 향후 대응

1. 공동 대책위원회의 기본 입장(별첨 성명서 참조)

이 사건은 두가지 차원으로 규정된다. 첫째,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 둘째, 국방의 의무에 대한 명백한 남용.

첫째, 전문 연구자의 글들, 특히 학위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논문들은 학술적 토론과 논쟁 또는 관련학과의 교수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 옳고 그름이 판정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신현준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창휘, 송주명 연구원의 구속영장에서 특히 중심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석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의 연구논문들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학문 사상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교권침해, 대학자율성의 침해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기무사의 이번 수사는 신중의 민간인 사찰이다. 군 입대 이전에 썼던 글을 군에 들어올 때를 기다려 특히 이창휘의 경우 경우 제대를 2일 앞두고 연행하고, 홍성태의 경우 제대 4일전 다른 사유(명령불복종 내지 군기문란)로 군 영창에 수감하고, 영창기간 만료 후 시기를 맞추어 구속한 것은 기무사 수사권의 자의적 남용이며, 기무사의 실질적인 민간인 사찰이다. 또한 송주명의 경우 금년 5월 입대 직후부터 노골적인 사찰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민간인 연구자의 탄압에 악용한 것에 다름아니다.

2 공동대책위원회의 향후 대응

공대위의 향후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서명작업을 내주 초에 완료하여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연결하여 7월 중순 이번 사건의 의미에 대한 각계 각층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각 정당의 관련자들과 접촉중이다. 한편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 참고로 교권 및 대학자율서의 옹호라는 차원에서 서울대 관련 3과(경제, 정치, 사회)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및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

이번 경찰과 국군 기무사령부가 학술연구서 및 연구논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명의 연구자들을 연행 구속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행위이다. 또한 민간인 사찰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그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민간 학술활동을 사찰하고, 군복무중인 연구자들의 입대 이전의 저술을 문제 삼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회주의권의 대개혁 및 전세계적 민주화 대세 속에서 정부조차도 대사회의권 및 대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술연구에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려는 현 정권의 조처는 자가당착적이고 반문명적인 처사이다.

이번 조치가 민주화운동을 탄압, 말살하려는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라고 간주하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내용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단호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당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1. 공안당국은 학문, 사상, 출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1. 대표적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1. 국군기무사령부는 민간인 연구활동에 대한 사찰을 즉각 중지하라.
- 1. 공안당국은 강제연행, 밀실수사, 불법구속을 즉각 중지하라.
- 1. 국군기무사령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학문과 사상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지 마라.
- 1. 공안당국은 불법구속한 6명의 학술연구자를 즉각 석방하라.

1991년 7월 2일

학문과 사상의 자유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 구속에 대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학술단체협의회(구로역사연구소, 문학예술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과사회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겨레사회연구소,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국교육문제연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회,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조, 민주출판노조협의회, 서울대 대학원자치회협의회, 한국사회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서울사회과학연구소

7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및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서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구속사건에 대한 류준상의원(신민당), 이수인의원(신민당), 조만후의원(민자당)의 질문이 있었고, 정원식 총리의 답변이 있었다. 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총리의 답변이 지난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김기춘 법무장관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에 대한 치안본부의 수사방침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본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박자료는 본 『자료집(III)』 「6-1」치안본부 대공3부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 「6-2」치안본부 대공3부가 소위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책자의 내용」등을 참조하시오).

1. 질문요지

0세 의원 모두 이 사건을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있다. 학문적 연구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세계사의 조류를 파악하지 못하는 냉전시대적 발상이며, 학위논문까지 문제로 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 사상, 출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수인, 조만후 의원).

또한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정신에도 어긋나는 자의적 법 적용이라고 지적되었으며(조만후 의원),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수인 의원).

2. 답변요지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국가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구속자들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중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석방용의도 있음을 시사). 한편 국군기무사 구속자는 군인 신분이므로 국군기무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1일 국군기무사 앞에서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구속에 항의하고 있는 동료 연구자들. 이 사건과 관련해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교수 서명자수가 1천명을 넘어서 건국 이후 학계의 최대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면담요청서

지난 6월 27일(목) 국군기무사령부는 현재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중인 송주명(성남 소재 방위부대), 이창휘(육군본부 참모부), 한준(서초동 정보사), 홍성태(육군사관학교) 4인을 군입대 이전의 저술활동을 문제삼아 연행하였으며, 곧이어 구속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내부의 기무만을 전담해야 할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입대 이전의 학술적 저술 활동을 이유로 이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민간인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국군기무사령부는 7월 1일 오전 현재까지 이들의 직계가족이 신청한 면회를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소재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개수사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취하고 있는 이와같은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장관을 면담하고자 합니다.

질 의

1. 구속된 이들의 혐의사실은 군입대 이전의 학술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권한과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 아닌가? 더욱이 제대를 며칠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들까지 구속한 것은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2. 기무사령부가 구속한 방위병의 소재와 혐의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밀실수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와 사건의 조작과정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1991년 7월 2일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 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최 장 집

1. 기무사의 면회 통제

공대위는 7월 3일 국방부 헌병대 책임자로부터 7월 6일에 가족외에 친구까지를 포함한 합동면회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오늘 기무사의 지시로 면회는 가족 3인 이내로 제한되었고, 가족별 면회로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가족 면회의 결과 확인된 바도 있듯이 기무사는 가족을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접촉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족의 면회시는 3-5인 가량 참여한 수사관이 조사내용이나 외부상황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통제했다.

변호사 접견은 이창휘, 송주명, 홍성태 씨는 공동 선임된 백승헌, 박성호 변호사에 의해 약 20-30분간 이루어졌으며(한준씨는 독자적으로 선임된 변호사와의 면접이 있었고, 이창휘씨는 공동 변호사 외에 가족이 추천한 다른 변호사와의 접견이 먼저 있었다), 가족 면회는 각 가족 별로 30분 가량 이루어 졌다.

2. 구속기간의 연장

접견 및 면회결과 구속자들에 대한 주요한 조사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구속기간이 다시 10일 연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면회가 통제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는데, 우리는 이로써 기무사가 밀실수사를 통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변호사 접견 및 가족 면회시 확인된 사항

(1) 건강상태

구속자 모두 오랜 조사와 수면 부족으로 피곤해져 있는 상태였다. 특히 홍성태씨의 경우 구속 이전부터 허리가 아팠었는데, 현재는 신장에 이상이 생겨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조속한 치료를 요하고 있음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도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진단만 받았고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외부상황과의 단절

구속자들은 자신 외의 구속자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대응이나 공대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3) 기무사 조사내용

조사는 주로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와의 관련이다. 연구소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연구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군복무중 연구소 활동을 했었는지 등이었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창립과정과 서사연과 새길출판사, 『현실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대책위원회의 자료집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있다.

두번째로 조사된 것은 각 연구원들이 집필한 글들이다. 이창휘씨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인 『현실과 과학』3집의 글과, 그 연장선상에서 씌어진 『현실과 과학』4집의 글, 송주명씨의 경우 석사논문의 일부를 확장한 『현실과 과학』4집의 글과, 그 연장선상에서 씌어진 『현실과 과학』6집의 글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홍성태씨와 한준씨의 경우도 대학교지 등에 전문연구자로서 집필한 한두편의 글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공동대책위원회가 누차 밝혔듯이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따름이다.

4. 공동대책위원회의 향후 대응방향

오늘 접견 및 면회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번 사건은 전문적 학술연구를 전근대적이고 비학문적인 사고방식으로 재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공대위가 그동안 천명해온 기본입장이 올바르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의 의미를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 국방의 의무의 전형적 악용 사례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대위는 지금까지의 대응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서명작업, 공청회 개최, 임시국회에서의 소청, UN인권위원회에 제소 등을 추진할 것이다.



군기무사 앞 농성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6명의 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와 구속자 가족 등 40여명이 2일 오전 병원간판을 단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앞에서 기무사령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속자 가족들은 이날 사건담담 취조관을 면담한 결과 오는 6일 오전에 가족들이 구속자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재성 기자>

한겨레 91. 7. 3

서울사회과학연 수사

8명 연행·사무실 수색

관련출판사 두곳도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소장 대학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원 8명(방위병 3명 포함)이 27일 치안본부와 국군기무사에 연행되고 연구소 사무실이 압수 수색당했다.

또 이들의 글을 주로 출간해온 출판사 2곳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수사관 20여 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압수수색, 연구원 지만수(26·서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씨를 연행하고 컴퓨터 1대와 계간지 <현실과 과학> 등 사회과학서적 30여권을 가져갔다. 이 연구소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날 한신대 윤소영 교수(무역학), 충북대 서관모 교수(사회학)와 연구원 13명이 '마르크스주의와 역사'를 주제로 '체미나'를 하던 중 치안본부 대공3과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수사관 20여명이 들이닥쳐 지씨를 연행하고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권현정(26·여·서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씨 등 연구원 2명이 이날 오후 6시경 연구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치안본부에 연행됐으며 오후 10시경에는 안상훈(25·경제학과 석사과정)씨가 연구소 앞에서 연행됐다.

연구소쪽이 확인한 결과 송주명(28·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방위근무중)씨 등 방위부중인 연구원 3명도 같은날 오전 출근길에 국군기무사 요원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9시 사이에 이들 연구원들의 논문을 출간해온 서울 마포구 망원동 485-10 새길출판사에 압수 수색이 실시돼 계간지 <현실과 과학>의 원고가 담긴 디스켓 40여개와 영업장부, 출간예정인 원고 등이 압수됐으며 28일 오전 11시경 민맥출판사에서도 신현준씨가 쓴 <사회주의 이론·역사·현실> 원고가 압수됐다.

한겨레 91.6.29



“순수 학문활동 중대 침해”

서울사회과학연, 연구원 무더기 구속 규탄

기무사 또 3명 구속

속본=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29일 진보적인 대학교수와 대학원생들의 모임인 서울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원으로서는 현재 방위병으로 복무중인 송주명(28·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이창희(28·사회학과), 한준(26·사회학과 석사과정)씨 등 현역군인 3명을 국기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치안본부 대공수사3부는 지난 28일 이 연구소 연구원 신현준(29·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권현정(26·여·석사과정)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과 기무사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3월과 4월 출판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사회주의 이론·역사·현실> 등의 단행본에 남한체제를 신식민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규정하고 “민중 중심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신씨 등과 함께 28일 연행한 안상훈(24·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씨 등 4명은

한겨레

91.6.30

29일 새벽 훈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소 소장인 김진균 교수와 김수행 서울대 교수 등 이 연구소 연구원들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치안본부와 기무사가 이 연구소 연구원들을 불법연행해 구속한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관련기사 3면>
김 교수 등은 사회주의권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온 정부가 스스로 낡은 이데올로기 족쇄를 깨기는 현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골목로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구·저술활동을 사법처리한 것은 문명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울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활동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이름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페체스트로이카 분석 등에서 보듯이 북한쪽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등 순수 학문적인 입장에서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 등은 이와 함께 “학문적 연구의 성과물들에 대한 평가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토론으로써만 평가될 수 있다”고 전체 발제와 해석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학문과 사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대판 ‘문서경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 연구원과 구속 각 가족들은 이날 오후 4시경 연구원들이 구속돼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서대문경찰서·기무사 등으로 찾아가 구속자면회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속옷과 책 등을 전달했다.

사찰 책임자 처벌 촉구

야권·재야 군기무사 민간인 내사 강력 비난

평민·민주·민중당 등 야권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등 재야 및 대학생들은 19일 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민간인 사찰 중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윤재걸 평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무사가 과거 보안사와 다를없이 여전히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보안사를 기무사로 명칭을 바

꾸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국민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책임자의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지난해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 이후 기무사로 명칭을 바꾸고 불법사찰을 못하도록 임무와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관련자 전원의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

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문화 민중당 대변인도 성명에서 "현정권은 지금이라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중지하고 불법사찰의 온실인 기무사의 즉각 해체를 통해 군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민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군기무사가 여전히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민기만으로, 정부는 기무사를 비롯한 모든 민간인 사찰기구를 즉각



사찰규탄

국군기무사가 학생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자 19일 서강대 교내에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창하 기자>

한겨레

91.3.10

해체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구속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양후원사업회(준비위)도 성명을 통해 △불법 대민사찰 및 강제징집 중지 △기무사 해체 등을 요구했다.

전대협과 서강대 총학생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감시와 대민사찰을 중

단하겠다는 군쪽의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군을 계속 정치적 하수인으로 이용하는 노정권에 맞서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사찰시인

"불순차단 예방조치"

국방부는 19일 군기무사 민간인 사찰(〈한겨레신문〉 1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이런 보도내용은 기무사에서 시행한 사항"이라고 확인하고 "기무사는 군을 보호하기 위해 현역은 기무사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운동권은 기무사에서 직접 사찰하지 않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관련자료를 입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사 의뢰된 12명은 현재 군 복무중인 자가 7명이고 전역자 2명, 미입대자 3명으로 이들은 '서울지역학생특별연합' 소속으로 입대 뒤에도 민중·민주혁명에 의거해 군내에 불순의식을 확산 기도하고, 군 장병 의식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예방차원에서 신원확인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 민간인사찰 변명에 분노

"군 와해공작 대비" 주장 설득력없어

정부가 수사사건의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전국적으로 항의집회가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항의가 격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에 가담하는 학생은 사진만 찍혀도 기소중지자로 분류, 취직은 물론 근본적으로 사회활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요즘 우리를 경악시키는 사건이 또 터졌다. 지난해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국군보안사가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뒤 또 다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다.

이번에는 군당국은 반체제운동권의 군 와해공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인 사찰이 불가피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상투적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안기부가 있고, 경찰이 있다. 지난번 사건의 국민사과에 비하면 적반하장이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각기 한마디씩 참고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데 함께 매진해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

게 참아달라고 하기 전에 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 장 우 <부산시 동래구 연산 7동 1949-37>

석탑도 아데, 숙익수, 드러나

군 기무사 민간인 사찰 파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옛 보안사)가 명칭을 바꾼 지 석달도 지나지 않아 민간인 사찰을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이 또다시 폭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본사가 이번엔 입수한 '긴급내사 의뢰'란 제목의 기무사 공문은 불과 12명에 대한 사찰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공문 자체가 '병산의 일각'이라는 사

실을 감안할 때

기무사가 현재

계속중인 사찰의

실상은 '보안사

시절에 비해 결

코 축소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며 민간인 사찰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또 내사대상 학생들 을 '의식화 용의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한 내사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띤 '사

찰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 일반 적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내사 지시지가 군 입대 뒤 불순의식의

무사는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예 방 차원에서 조사를 명분으로 앞으로 대학 총학생회 등 학내 운동권과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사찰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군조직을 위협할 정도 의 운동권세력은 어차피 극소수

에 불과하며, 이같은 급진운동권 세력에 대해서는 현재 안기부와

경찰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 여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면밀한

수사를 펴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이다.

(면회) 및 문제동료 접촉 등 특별 이 동향 유무, 불온언동 및 불평 불만 언동사항(소속부대) 등 구 체적인 주변동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 나 단순히 '예방차원'의 내사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쪽도 국방부쪽 의 해명과 관련, "이번 사찰대상 자가운데 북학생 2명은 물론이 고 군복무중인 학생들 가운데 사 실상 운동권과 관련이 없는 학생 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이

런 공문으로 미

뤄볼 때 기무사

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꽤 폭넓

게 사찰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

다"고 주장했다.

이무튼 국군기

운동권아닌 학생도 대상 규모방대 '예방차원' 발뺌... 획기적 개편절실

는 분석이 나오

고 있다.

실제로 공문에서 폭로된 사찰 대상자 12명은 모두 서강대생이

다. 기무사가 서강대생뿐만 아니

라 다른 대학의 모든 운동권학생

들에 대해서도 이런 내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운

동권에 대한 사찰 규모는 생각보

다 훨씬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내사 지시가 기무사

령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

니고 서울본실에서 이루어진 것

도 의미가 깊다. 전국 주요도시

마다 설치돼 있는 기무사본실도

이번 경우와 같이 필요할 경우

본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

확산을 기도할 우려가 있는 학생

들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또 "민간인에 대한

조사지시는 해당지역 기무사가

경찰과 안기부의 협조를 얻어 군

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발뺌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어 "좌익운동세력

은 군을 반민주·반민중적 지배계

급의 군대로 인식,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여 군 무력화 및

외해를 기도하는 한편, 군을 혁

명의 동력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군투쟁 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쪽의 논리에 따르면, 기

무사는 5공화국 시절 운동권학생들을 강제로 학 원프락치로 활용한 '녹화사업' 운 이병의 민간인 대규모 사찰 폭로 등으로 들끓었던 국민들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군수사 기관이 여전히 민간인에 대한 불 범 사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 당국은 반체제적인 일부 대

학운동권의 군악해공작에 대비하

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내사지

시가 불가피했다는 응색한 변명

을 내세우기에 앞서 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회

기적인 개편을 서둘러야만 한다

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기무사까지 학원사찰에

나서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무사는 이번 '긴급

내사'에서 해당학생의 군부대와

추소지는 물론 본적지 관할 기무

부대에 대해서도 내사를 지시해

3중으로 '입체 내사'를 실시하고

자 했다.

또한 공문에서 해당지역의 기

무부대가 보안에 유의해가며 내

사한 뒤 21일까지 보고하도록 명

기해 놓고 있다.

기무사는 또 내사사항으로 △

연고지 주민의 평(본적지) △사

회문제권 인물 접촉 등 평소 인

동(추소지) △문제권 인물 방문

한겨레 91.3.20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옛 보안사)가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계속해 온 사실이 최근 폭로되면서 정보기관 등의 대학사찰활동 문제가 또 다시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운동권 대학생들에 대한 경찰과 안기부의 광범위한 사찰활동 사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기에 기무사마저 여진히 그 일각을 담당하고 있음이 장차 내부문서라는 명백한 증거 자료를 통해 폭로됨으로써 경찰 안기부-기무사의 3중구조로 이루어지는 감시체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가동되고 있는가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이번 내부문서에서 드러난 기무사의 사찰활동 대상이었던 서강대 학생들 중 군에 입대하지 않았거나 제대된 학생들이 대부분 운동권과 크게 관계가 없거나 현재는 별로 활동을 하

지 않는 학생들이 것으로 알려 지 지 기무사 학원사찰의 실상 등 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서강대 학생들은 이밖에 폭로된 기무사 공문은 기무사가 대학가에 프락치를 구축해 놓은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난 89년 서강대 정외과에는 '최동철'이라는 가짜이름의 프락치로 추동되는 학생이 있었는 데 이번 기무사의 사찰대상 학생 선장이 최씨의 활동과 결코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9년 3월에 학교에 모습을 보이 기 시작해 "87학번으로 입학했 으나 몸이 아파 휴학했다"며 한 학기 동안 각종 교내의 집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학생들과 어울려 지냈으나 1학기말에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그뒤 학적부에서 최씨의 이름이 확인해 본 결과 최씨는 기무사학원으로 판명됐다. 생들은 "기무사의 사찰대상 명단이 주로 89년 세대로 최씨와

동이 거의 배일에 싸여 있어 화 인할 길이 없지만 국민대생 김 정환씨 생애장 추장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가에 프락치만 을 구축하려는 기무사의 기도가 계속돼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방부는 기무 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 폭로에도 불구하고 "폭력혁명 세력의 군 침투를 막는 것이 기무사의 고유임무"라는 주장을 내세워 불법 대민사찰을 오히려 용인하는 자세로 나왔다. 이는 윤석양씨 폭로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했던 대민사찰 중지 약속이 거짓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학기 를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한 기 무사의 사찰은 더욱 강화된 형 태로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기관 학원사찰 강화 프락치 동원 여전...활동비도 늘려

대학가에 대한 경찰의 사찰활동은 이미 치안본부의 '치안행정 종합감사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이 유급망원까지 활용해가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찰예산 가운데 정보비와 대공활동비가 지난해 보다 각각 20.1%, 19.3%나 늘어나는 등 사찰활동에 대한 뒷받침도 더욱 '튼튼해진' 상태다. 안기부의 경우 아직까지 불법 대민사찰 사실이 공식문서로 확

인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안기부 장학생' 등을 동원,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운동권에 대한 사찰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서도 잡지 못한 전문화 된 서강대 학생회장이나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을 안기부가 검거한 사실 등은 대학가 사찰활동에서 안기부가 경찰보다 '한수 위'임을 입증했다. <김종구 기자>

한겨레 90.5.11

사복헌병 '학원사찰'

학생들에 조사받고 풀려나

【수원=배경록 기자】 10일 오전 0시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교내에서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수도군단 헌병대 소속 김인호(23) 병장, 추영두(22) 상병 등 사복군인 3명이 학생들에게 불법적 조사를 받고 1시간40분만에 풀려났다.

이 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생회관과 도서관 주위를 서성대 다가 학생들에게 붙잡힌 김 병장 등은 학생들에게 써준 자인서와 각서에서 "수도군단 헌병대 수위 파견대장인 신종식 중사로부터 경기대생들의 집회 내용과 시위 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교내에 들어왔다"며 "학원사찰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들로부터 지난 9일의 경기대 교내집회 내용과 시간 대별 학생들의 동향, 구호 등을 기록한 메모지 2장과 헌병대 신분증, 특공요원 자격증, 공용 의술·의박증 등을 빼앗고 1시간40분 만인 오전 2시10분께 풀려났다. 이에 대해 수도군단 헌병대쪽 은 "김 병장 등이 탈영병 검거를 위해 의술, 학생들의 시위현장을 보고 호기심때문에 경기대에 들어갔으며, 학생들에게 붙잡힌 뒤 강요에 의해 자인서와 각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부대서 대학정찰

창원대 사복 18명 1시간 사진촬영

【창원=김현태 기자】 육군 특수부대원들이 유사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정찰을 한다는 구실로 대학 당국의 허락없이 대학 구내에 들어와 건물과 지형사진을 촬영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대 구내에 경남 사천군 곤양에 있는 육군 00특공여단 부대원 18명이 사복차림으로 들어와 사진촬영을 하고 지형지물을 정찰하다 수상히 여긴 학생들에게 붙잡혀 1시간쯤 신분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사실이 1일 밝혀졌다. 창원대 학생회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경 00특공여단 2대대원들이 사복차림으로 카메라를 지닌 채 1시간 동안 교내를 돌아다니며 사진촬영을 하다 학생들에게 붙잡혔다.

이날 학생들은 특수부대원들이 촬영한 필름 4통을 빼앗고 경위서를 받은 뒤 풀려났다. 이들은 모두 이 부대 소·중대장급 초급장교들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인솔한 2대대장 이아무개(35) 중령은 "유사시 군 숙영지와 지휘장교들의 현지 지형지물 파악을 위해 학내에 들어왔다"며 "학교 당국의 사전 허락없이 교내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경위서를 쓰고 풀려났다.

또 이 중령은 "창원대 교내에 들어온 것은 이 대학이 부대 작전지역 안에 있기 때문이며 군사작전을 위해 인근 산악을 정찰하다 부대원들의 요청으로 학교를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라며 "지형지물 정찰과 사전 답사는 일상의 업무"라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학생회쪽은 "지난달 24일에는 형사대가 학내에 무단 진입, 인문대 학생회장 이선재(24·국문3)씨를 연행해 갔다"며 "군·경이 합동으로 유사시 대학을 무력진압하겠다는 저의를 내보인 것"이라고 규탄하고 "이와 같은 군의 정보수집과 정찰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군 방위병 학원사찰 의혹

경기대서 불잡혀 "범민족대회 진행상황등 수집"

부대관계자 "탈영중" 주장

[수원=배경록 기자] 19일 밤 10시에 경기도 수원시 의왕동 경기대학교 학생회관 4층 경기관광를 탐 동아리 사무실에서 학원사찰을 하던 공군 제○○전투비행단 보안부대 소속 방위병 장성래(21) 일병이 학생 10여명에게 불친화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 사무실에

서 조사를 받은 뒤 17시간만인 20일 오후 3시에 풀려났다.

장 일병은 지난 12일 진대협 국토순례단과 수원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5백여명이 경기대와 수원시내에서 개최한 8·15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면서 경기대생들과 함께 행동, 서울 연세대의 범민족대회에 참석할 뒤 이날 학생들

과 경기대 교내에 있다가 수상히 여긴 학생들에게 적발됐다.

장 일병은 "장 일병이 지난해 9월 방위병으로 공군 제○○전투비행단 시설대에 입대된 뒤 지난해 11월부터 보안부대에 파견돼 근무해왔으며 부대 상관으로 부터 진대협 통일선봉대의 활동 상황과 연세대 범민족대회에 참석, 수집한 정보를 부대에 보고

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장 일병은 학생들에게 불친화 당시 'K-13'까지 보안담당관이 발행한 신분증과 무선호출기, 카메라 플래시, 현금카드 등을 갖고 있었으며 소지품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 진행 상황과 집회 및 시위상황을 시간 대별로 자세히 기록한 노트도 발견됐다.

경/겨/리 | 90.8.24

장 일병은 학생들에게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연세대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펴 2차례 부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후 가기간인 지난 18일부터 경기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학원사찰이 아닌, 우연히 알게 된 관광 경영학과 정아규개군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갔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장 일병은 보안부대 소속이 아니며 현재 탈영중으로 연세대 범민족 대회에 참석해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III. 군 민주화를 촉구하며

이상의 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군에 의한 정치개입과 민족민주운동 탄압이 6공화국에 의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체계화되고 확대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6공화국의 지배전술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더욱 고도화된 대국민 폭압기구로써 작용하고 있는 군 공안기구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의무징집'이라는 병역제도를 악용한 '6공식 강제징집'을 통하여 선진적 학생활동가와 민주적 병역특례 노동자들을 사회에서 군으로 격리시키는 차원을 넘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녹화사업 즉, 대국민사찰-입대 예정자들에 대한 사찰, 사병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프락치 공작을 통한 정보수집, 이를 기반으로한 조직사건의 조작과 선진적 활동가 출신 입대자들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선차적으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탄압, 더 나아가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에 의한 각종의 민족민주운동 탄압은 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모순 즉, 창설 이후 지금까지 군이 외세의 침략세력에 맞서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국민의 자위적 무장력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 용병화, 사병화 되어 외세와 결탁한 독재 정권의 최후의 물리력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군에 의한 민족민주운동 탄압이 철폐되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시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강제징집의 철폐

『병역법 시행령』 103조-실형 2년 미만자 모두 징집-를 88년 5월 이전의 실형 6월이상 선고자 징집 면제(집행유예 포함)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선진적 학생 활동가에 대한 강제징집이 철폐되어야 하며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의 경우에도 무관 후보생의 복무기간이 적정비례제로 제적자의 군 복무기간에 가산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해야 한다.

방위 상업체 병역 특례복무자에 대한 강제징집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 2항- 현재는 어떤 이유로든 회사 측에 의해 해고되기만 하면 입영하게 되어 있음-에 해고쟁의 소송 계류 중 즉,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입영이 연기 가능하다는 것이 보충, 명시하도록 해야하고(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은 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노동조합법』 제3조 4호 규정에 의거), 징집된 경우에도 특례복무기간을 적정비례로 군 복무기간에 가산하여야 하며 특례복무기간 또한 현실에 맞추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이 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시행예정인 잉여 병역 자원의 산업현장 투입 정책은 현재의 방위산업체 특례자와 같이 노동3권이 박탈당한 채 무제한적 노동착취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의 노동자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강제 징집이 자행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모자라는 산업 인력문제는 노동 조건의 개선으로 해결해야하고 병역 자원이 남아돈다면 군 병력을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자원자에 한해'라는 단서가 붙었다하더라도 1년 8개월의 군 복무대신 취직하여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일 뿐이다. 따라서 이는 철회되어야 할 정책이며 잉여 병역 자원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와 녹화사업(프락치공작)의 철폐

윤석양이병의 불법적인 대국민 사찰 폭로 이후 대국민 사찰의 중지 및 기구 축소 등을 약속하고 개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책이었음을 이제는 국민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올 3월에 폭로된 서강대의 군 입대 예정자와 제대자에 대한 사찰,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청주대 '자주대오', 안동대 '반미 애국 학생회' 등의 조직 사건과 '서울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에 대한 구속 사건은 아직도 대국민 사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군 사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제반 사회영역에 대한 정치공작을 더욱 교묘하게 진행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진행되는 프락치 공작은 대상 사병들의 육체와 정신을 처참히 파탄시키며, 구속된 사병들은 군이라는 집단의 폐쇄성과 보안이라는 허울 속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5공화국에서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의문사를 포함해 6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진행된 정치공작 속에서 발생한 모든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기무사는 이러한 제반의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군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위해 해체되어야 한다.

3. 군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군 양심수는 현재 약 50여명으로 청년학생, 노동자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 민주화를 위한 군 내부에서의 자주적 노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형을 살고 있으며 군 수사당국이 밝힌 이들 구속자들의 혐의 사실을 보면 반정부 낙서에서 양심선언, 군 민주화를 위한 조직 결성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주로 개인적이고 우발적이며 군 민주화 투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구속되는 형태에서 점차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며 목적의식적인 군 민주화 투쟁과 관련 구속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기구에 의한 확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되는 병사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과 오히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89년 11월의 '사노맹' 사건, 90년 7월의 동국대 '반미구국전선' 사건, 8월의 '혁노맹' 사건, 11월의 '자주.민주.통일' 사건, 12월의 동국대 '민학련' 사건과 '전민학련 사

건', 91년도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사건,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상지대 '민학련' 사건, 안동대 '반미애국 학생회' 사건,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구속 사건 등과 관련 구속된 군인 수가 약 44명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 군 내에서 학습을 위한 소모임을 갖거나 유인물 제작 또는 양심선언 등을 통하여 군민주화를 촉구하다 구속된 이들 군 양심수들의 조속한 석방과 조직사건과 관련 또는 양심선언 후 수배되어 있는 7명의 전의경, 7명의 군인들에 대한 수배해제와 명예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군 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4. 전투경찰과 백골단의 해체

마지막으로 항시적인 군의 정치 개입과 민족민주운동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전투경찰과 백골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최근에 잇달았던 전투경찰, 백골단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강경대씨와 김귀정양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전투경찰, 백골단이라는 준 군사조직을 이용하여 독재 권력의 안정적 집권을 유지하려는 저의에 의해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현재의 전투경찰, 백골단의 설치 근거가(?) 되고 있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은 김 신조 사건으로 대표되는 60년대 말 70년대 초 북한 남침 기도의 현저화(?)라는 구실 아래 체제위기를 부각시켜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탄압하기 위한 사전 의도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정권 보위대'의 설치에 의해서만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던 군사 독재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성격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간첩 작전 수행'이라는 미명 하에 설치된 전투경찰은 민주운동 탄압의 첨병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군인들을 국방의 의무이행과 무관한 전투경찰로의 강제차출은 명백히 군을 이용한 대국민 탄압 책동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전투경찰대 설치법에는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현장에 출동하여 강제진압을 하게 하는 것은 위법적이며,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역적 행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투경찰, 백골단이 백주대낮의 살인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들 개인의 자질이나 난폭한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 탄압의 첨병적 기능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전투경찰 자신들도 이러한 모순 구조속에서 이중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상시적으로 대국민 탄압의 현장에 동원하기 위해 무자비한 구타와 기압으로 전투경찰대는 유지될 수 밖에 없으며 이 속에서 수많은 민중의 아들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올 7월에도 이리경찰서 제 308 전투경찰대 소속의 길왕식 이경이 집합에 늦게 참석했다는 이유로 고참에게 가슴을 맞아 숨졌고 충북 도경찰 제 707 전투경찰대 소속의 김현희 이경이 역시 단체 기합 중 고참들의 구타로 죽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전북도경 제 506 전투경찰대의 지성룡 일경의 경우 8개월째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피눈물나는 추적 결과, 휴가후 귀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고참들에게 맞아 숨졌으며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지성룡 일경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지 이경의 사망경위를 밝히고 시신을 찾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무고한 젊은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대국민 탄압을 위해 변형된 군 조직인 전투경찰대와 백골단은 해체되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강 건너 불인가, 발등의 불인가?

1. 개요

우리 사회내부에 좌익혁명세력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무감각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좌익혁명세력은 지하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기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백주의 대로변에 김정일의 생일 축하 현수막을 걸 정도로 대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지하 적색단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89년 12월 치안본부가 밝힌 「좌익혁명세력의 실상」에 따르면 경인지역에만 1,200여명이 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부천지역이 20 여개 노동상담소를 중심으로 300 여명, 종교 교육 사회단체 등에서 200 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원, 안양, 안산지역은 20 여개 노동상담소에 500 여명, 성남지역은 250 여명이 좌경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좌익혁명세력들은 지하조직과 반공개조직을 도시에 운영하면서 만약 검거시에는 조직의 기밀을 죽음으로 지키며 재판받을 때도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모든 일에서 혁명의 신념을 갖고 비밀활동을 준수할 것 등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민주발전과정의 혼란시국에 편승하여 본색을 드러냈던 좌익혁명세력들이 동구 공산권의 연쇄적 붕괴와 거센 국민적 저항으로 활동이 주춤하더니 최근 들어 허황된 폭력혁명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불순세력에 관한 한 성역시되어 오던 군내에까지 그들의 조직원을 침투시켜, 혁명의 전위조직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외부불순단체를 이용한 불온 유인물 발송을 통해 장병 오염 및 군내 좌익세력 확산을 획책하는가 하면 그들의 조직원을 “군입영”이란 합법적 방법으로 침투시켜 지휘사각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불온사상을 주입, 음성적 의식화 활동을 하기도 하며, 과거 운동권 활동 경험자와 소외계층 등의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군와해를 위한 전위세력으로서의 결성을 시도하거나 부대 이념교육 내용을 “흑색선전” 운운하며 은연 중 장병들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이념적 혼란을 유발케 하며 심지어 침투한 조직원과 포섭된 자들을 통해 군사기밀과 각종 군사활동사항을 수집하여 대외에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대군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이 극히 염려스러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금까지 국가수호의 최후보루로 자타가 공인해 온 군마저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은 국

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최근 좌익혁명세력의 군내부 분열 및 장병오염 기도사례를 발췌, 소개 하니 각급 지위관들은 이념전투차원의 지위관심을 경주하여 부하장병들의 좌익혁명세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불순세력의 군내침투전술

가. 불순세력의 대군시각

불순세력은 민중이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기치아래 힘차게 투쟁해야 하며 투쟁의 중점을 미제축출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중은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세력이 미국이기 때문에 반미를 민중해방의 핵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민중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반미단체를 결성해야 하며, 군도 예외될 수 없고 부분적으로 혁명세력화함으로써 혁명을 용이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군부투쟁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소, 대공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이며, 국군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철저히 위장된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의 침병집단이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최전방인 한반도에서 민중이 봉기한다면 군은 지배계급의 하수인으로서 민중의 제압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국군의 존재가치를 소위 ‘남한민중 업압조직’과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반군적 편견을 고수하고 있다.

군대문화 (MILITARY CULTURE)라는 말의 의미를 왜곡하여 군의 일사분란한 지휘체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등이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지극히 부정적인 요소로 매도하고 있다.

군을 혁명세력화하는 것은 그들의 무장투쟁전술과 일치하는 바, 그들은 “혁명의 역사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무장대오를 전민중적, 전국적으로 조직하되 민중 스스로 무장 자위조직과 군 세력 중에서 혁명화한 조직으로 구분하고 이중 특히 군에서 획득된 무장조직은 우수한 군사적 기술을 가진 무장 세력이므로 매우 중요한 목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나. 침투전술

(1) 전략적 목표

군을 내부적으로 붕괴시켜 무장해제화하고 새로이 창출되는 민중의 군대로 하여금 반미 해방전선에 투입한다.

(2) 전술적 목표

반공 이데올로기의 부당성을 주입하여 반미의식을 고양하고 군내 잔존하고 있는 모순점과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확대왜곡함으로써 하급조직으로부터 불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부조직과 연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3) 단계별 목표

(가) 입대전 단계: 좌익 핵심분자 양성

① 시각교정 단계

사회전반에 걸친 제 문제를 좌익편향적 시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의식화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공산/주체사상의 무장화 단계

공산주의만이 사회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케 하며, 공산혁명투쟁에 대한 찬양일변도의 미화교육과 함께 복괴의 적화전략전술이론을 습득케 한다.

③ 조직 투쟁방법 숙달단계

의식화 교육을 통한 좌익 조직활동과 투쟁방법을 숙달시키고 대중의식화 선동 및 폭력투쟁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나) 입대단계

① 제도적/의도적 침투단계

복괴의 전위조직은 주도면밀한 대군 와해공작 계획을 수립하고 입대에정자에 대한 의식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에게 오염된자들이 입대후 군내부에서 활동해야 할 공작지침과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군 내부의 상황에 따른 활동내용을 조정통제하고 있다.

또한 영외에 노출된 휴가, 외출 의박장병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순한 대화와 토론을 교묘히 유도하는 등의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오염된 자들은 대다수의 건전한 장병들에게 책자, 유인물등의 불온자료를 제공하는 등 좌익사상전파와 군내 불평불만등을 조성하고 있다.

② 조직확장 단계

불순분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친분, 학연, 지연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기존의 비공식 사조직에 침투하여 정착한 후 조직의 성격을 좌익편향으로 전화시키거나 의도적인 선심공세를 통해 불평불만자를 포섭, 조직화하여 비공식 좌익조직을 결성하는 등 좌익 조직을 확산하는 단계이다.

③ 군조직 와해 단계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일을 방해하는 용병세력으로 왜곡함은 물론 군내 부조리를 과장 선동하여 정당한 명령에 대한 수용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킨다.

억지논리로 군내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변하면서, 정당한 명령지시일지라도 적당한 구실을 빌미로 불복종할 것을 선동하는등 군지휘체제의 혼란을 조성한다.

이같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평시에는 정상적인 명령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토록하고 전시에는 집단폭동, 지휘관, 상관을 살해하여 군을 일거에 무력화시켜 적화통일을 달성한다.

다. 군부 투쟁(M.M)의 원칙

- (1) M.M을 위해 군내 핵심분자를 발굴하여 투쟁역량을 부여하고 M.M에 대한 각 계각층의 관심을 고취시킨다.
- (2) 위관 장교급 이하를 중심으로 투쟁조직을 구성하고, 군내 모순과 사회, 경제적 모순을 최대한 증폭시켜 투쟁의식을 고취한다.
- (3) 각계각층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내 동조조직을 확대함은 물론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을 받는다.
- (4) 효과적인 M.M을 위해 현역을 기본구성체로, 방위병을 보조구성체로 구분한다.
- (5) 소위 "민중을 억압"하는데 투입되는 특수부대나 방위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특히 방위병은 기층민중에 속하고 원하는 부서에 보직이 용이하며, 외부조직과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방위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한다.
- (6) 매사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상관, 동료등 주위로부터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운동기반을 구축한다.
- (7) 조직원이 군입대후 신념이 약화된 교훈을 되살려 끊임없는 자기반성으로 사명감과 주체적 자세를 견지한다.
- (8) 사회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투쟁에 대한 확신으로 투쟁하여 M.M을 위한 희생정신을 견지한다.
- (9) 관념적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라. 군부투쟁 방법

- (1)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며 군내 모순점에 대한 토론회등을 통해 반체제의식을 주입한다.
- (2) 화장실, 공공시설, 공용도서, 내무반주변등에 선전선동 구호를 낙서한다.
- (3) 독서회, 종교회, 향우회등 사조직의 활동을 강화하며, 체제의 모순을 부각시킨다.
- (4) 현역은 부대단위, 방위병은 지역단위로 불순구호, 선동가 보급등을 통해 의식화를 추진한다.
- (5) 군의 모순점을 빌미로 집단행동, 양심선언, 자살 및 자해행위등을 유발시킨다.
- (6) 불순의식을 지닌 입대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활동여건을 보장한다.
- (7) 영외 출타시 군내비리 및 모순에 대한 확대왜곡과 상관비난 행위등을 강화한다.

3. 침투유형

유형1: 군입대 장정 통한 군내 좌경의식 확산 획책

제00사단 정모 방위병은 불순운동권 단체인 "현장이전국" 조직책으로 활동하던자로 군입대후 조직의 투쟁활동기반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료 사병들을 포섭, 지하씨클을 결성하고 수시 토론회를 통해 군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등 복귀의 적화노선을 주입하다 피검

* 제00사단 박모 이병은 면회객을 가장하여 접근한 조직책으로부터 "투쟁의지를 더 높여라"는 지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 후 운동권의 비호아래 이른 바 "양심선언"을 자행

유형2: 불순단체의 불온유인물 발송, 장병 오염기도

* 전북 완주 "00교회 청년회"에서는 '90.2.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다 입대한 제 0 합대사 박모 상병의 16명에게 "양키에게 강간당하는 조국의 산허리" "군부 독재정권은 우리 동포가 아니다." 등의 불순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발송하여 장병 오염 확산을 획책

* 대학 운동권 불순 씨클인 "한국 경제 연구회"에서는 '90.1 입대한 회원이었던 제 0 사단 허모 일병에게 "노 00, 김 00, 김 00의 대가리를 총으로 찢어버리고 싶다..."는 등 3당 합당에 불만을 품은 서신을 발송.

* 제 0 군지사 00대대 이모 상병은 '90.1 재학시 같은 지하씨클 회원으로부터 "경산군 농민회는 전망이 밝다. 그만큼 착취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을 많이 해라"는 요지의 의식화 활동을 독려하는 서신을 접수

유형3: 지휘 사각지대 이용, 의식화 교육 획책

* 제 00 사단 김모 이병은 "5월의 노래" "그날이 오면" 등의 운동권 노래모음곡 테이프를 수시 청취하며, 소속대 장병들에게 "현실을 잘 표현한 음악이니 들어 보라"며 의식화 교육을 시도

* 제 00 사단 00연대 강모 이병은 복귀 역사서적인 "조선전사" 등 4권의 불온서적을 반입후 연대장 운전병에게 탐독을 권유하면서 "전 군인들이 단결해서 미제국주의의 심장에 애국의 단칼을 꽂아야 한다."는 등 의식화 교육

* 제 00사단 00연대 이모상병은 "노동운동론 연구" 등 6권의 불온서적을 반입 후 병사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두면서 은연중 동료들의 탐독을 유도하고 수시로 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등의 의식화 교육 기도

유형4: 동조세력 규합, 군부외해 전위세력 결성

*제 0군단 이모 상병등 00대 운동권 출신 사병 5명은 김 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이적단체인 “불꽃회”를 조직후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동료들을 포섭

*제 00사단 임모 방위병은 서울대, 고대출신 20여명과 함께 결성한 “기독교화 노동운동 연합선전”사업부장으로 활동하면서 '90.2. 폭력혁명을 통해 헌정권을 타도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자 해방”, “농민해방”등 이적 표현물 20여종을 제작 배포

*제 0군단 박모 방위병등 2명은 '90.1. 불순단체인 “자민학련”으로부터 좌경서적을 반입후 동료들에게 탐독할 것을 권유하면서 동조의사를 표명한 방위병 8명을 불순 단체에 가입 유도

유형5:부대 이념교육 내용반박, 은연중 현재제부정

*제 00사단 00연대 정훈병 문모 이병은 '89.10 연대장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동료사병에게 교육내용을 반박, 부인하면서 은연중 공산주의가 우월한 양 불순사상을 유포

*제 00사단 00연대 한모 일병은 '89.6 중대장의 좌경학생운동권에 대한 이념무장교육시 “중대장님은 학생들이 무엇때문에 반정부 활동을 하는 지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면서 면박

*제 00 탄약대대 이모 병장은 '89.4 대대장으로부터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정신교육을 받은 후 동료들에게 “병사들의 현실비판적 사고능력을 마비시키며, 공산주의에 대한 흑색선전이다.”라고 반박하는 등 은연중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주장

유형6:군 내부문제 대외 유포, 반군의식 조장

*제 00 사단 강모 이병은 대학 재학시 반전, 반핵운동목적으로 결성한 “현대과학 연구회”회장으로 활동중 입대한 이후 '90.3 모친 면회시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모교 대학에서 “소요진압 계획”에 대한 양심선언 시도

*제 0군단 이모 상병은 '89.10 전교조에서 극렬활동중인 누나에게 지휘관의 사적비리와 “군이 전교조의 참뜻을 모르고 병사들에게 부당성만 교육하고 있다.”는 서신과 함께 “용기를 잃지말고 투쟁하라”는 자작시를 작성 우송

*제 00여단 김모 상병은 '90.2 면회온 친구에게 “정훈교육이 독재정권의 분단 고착화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의 부당성을 설명하여 장병의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고 선동

4. 군내 활동사례

가 병 민주화 추진 위원회 결성 사건

(1)개요

30 사단 포병연대 상병 000(22세, 원광대 법학과 1년 수료)은 입대전 이념서적탐독 및 의식화 학습으로 의식화되어 입대 후 병영 내 죄경이념을 공고히 하고 장병들에게 불온사상을 주입하여 의식화시킬 목적으로 북한 농산집단을 찬양 등 조하는 등 병영의식화 활동 중 적발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된 사건임.

(2) 입대 후 주요 활동 사항

*'88. 12월말 경 소속 부대 내에서 의식화 성향이 있는 병사들로 핵심조직을 구성하되 별도로 발각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들이 쉽게 공감하여 호응할 수 있는 “고참병의 횡포방지” 등을 내세워 대중적 조직을 결성한 다음 핵심조직을 대중조직에 침투시켜 의식화하고 대중적 조직원 중 의식화된 인원은 핵심조직에 편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한다는 기본전술을 구상.

*'88. 7. 9. 휴가 기간 중 전북 익산군 거주 채경숙(22세, 여, 전주기전 유아교육과 졸)을 의식화시킬 목적으로 군 입대 전 죄경의식화 학습 교재로 사용하던 불온서적 “찢겨진 산하(정경모 저)” 1권을 탐독케 하였음.

*'89. 2월초 -- '89. 3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 소속대 대공초소, 저탄장, 화단 등에서 상병 000 등 4명에게 개별적으로 가족관계, 학력, 가정환경, 사회현상, 운동권 가요에 대한 가창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등 병영의식화를 주도할 핵심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의식성향을 파악하였음.

*'89.3월 초순 일과 후 자유시간에 소속 포대 통신 창고에 상병 000 등 4명을 호출하여 군입대 전 자신이 포지하고 있던 사회현상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주입, 선동한 후 “사회 및 병영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소위 “사회문화연구회”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였음.

*'89. 3월 초순 16:00 경 위 통신창고에 소속대 상병 000 등 5명을 호출한 후 고참병들의 횡포를 막고 포대 분위기를 쇄신하여 사회생활의 연장처럼 자유롭고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병민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선동하여, “사회문화연구회”의 기초조직을 토대로 “병민주화 추진위원회”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였음.

*'89. 3월 초순 소속대 상병 000 등 4명과 “병민주”와 “사문연”의 행동방향 설정을 모의한 후 동년 5월 중순경 소속포대 관측소에서 관측병으로 파견 근무 중 이 조직들의 목표, 해야 할 일, 행동방향, 주의사항, 구호 등 비밀조직의 강령을 작성하였음.

*'89. 5. 하순 -- '89. 6. 6. 사이에 소속 포대 관측소 및 내무반에서 “병민주” 회원 상병 000 및 비회원 상병 000 등 6명에게 개별적으로 “병민주” 및 “사문연”의 강령을 보여준 후 비회원을 신규로 가입시켰음.

*'89. 6. 7.부터 2박 3일간 위로휴가 중 대학 재학 시 함께 의식화 학습을 하였던 회원들과 접촉하여 위 강령들이 호평을 받자, 여자친구를 방문하여 동인의 방에 있던 타자기로 타자를 부탁한 후 원광대학 부근의 복사점에서 “병민주 강령” 10부, “사문연 강령” 8부를 복사하여 귀대시 휴대하였음.

*'89. 6. 11.-- 6. 18. 간 소속 포대 휴게소에서 "병민추" 회원 상병 000 등 11명과 비회원 상병 000 등 9명을 집합시켜 귀대시 휴대하였던 "병민추", "사문연" 강령의 복사물을 읽힌 후 조직의 취지를 설명하여 비회원들을 추가로 가입시켰으며, 회원 유기정 등 4명을 별도로 호출하여 두 조직의 강령 복사물을 각 1매씩 건네주고 읽은 후 소각하여 보안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병영의식화 및 동조세력 포섭활동을 강화하였음.

*'자신의 죄경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장병들에게 불온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 휴가차 출발하는 소속 포대 병장 000에게 부탁하여 공산주의 불온도서를 구입 탐독하였음.

*'89. 6. 24. 24:00 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불침번 근무중이던 일병 000에게 불온서적인 "한국경제론"을 탐독하도록 권유하는 등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 동조하면서 병영의식화 활동 중 검거되어 군재 회부되었음.

(3) 교훈

1년 이상 장기간 병영내에서 20여 명의 동료병사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복귀 찬양 및 죄경의식화를 기도하고 "사문연", "병민추" 등 비밀조직을 결성 활동하였으나 병사들이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동조하여 왔으며, 관측 소대장을 대상으로 불순언동을 시도하다가 지휘보고되어 검거되었음.

나. 병영의식화 기도사건

(1) 개요

0사단 00연대 14중대 이병 000(21세, 인천대 산업공학과 1년 중퇴)은 대학 재학시 이념씨클에 가입 후 죄경의식화된 자로서 군 입대후 동료들을 대상으로 좌경의식을 선동하는 언동 및 군인교회 내 비치된 찬송가에 복귀를 찬양하는 불온 낙서를 자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군재에 회부된 사건임.

(2) 입대 후 주요활동 사항

*'89. 3. 15. 입대한 이래 입대 전에 지니고 있던 체제부정적 비판의식을 간직하기 위해 수시로 내무반 등지에서 운동권 가요를 흥얼거렸음.

*신병교육 중인 '89. 3월 말경 씨클회원 이미영(여, 가정과 2년)에게 "나는 입대한 이후 전보다 더욱 애국심에 불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운동권 가사를 적은 편지를 발송하여 자신의 입대 송별연 석상에서 다짐한 대로 이념의 변질이 없음을 알렸음.

*'89. 3. 15-4. 25 기간중 약 7회에 걸쳐 석식후 휴식시간에 신병교육대 내무반에서 동료 훈련병 박 00등에게 반미, 반정부, 반체제 의식화 교양후 민중정부수립의 당위성을 선동하였음

*'89. 4. 1 신병 이념교육시간에 교관 중위 000 로부터 3분 발표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 운동사와 그 오류"라는 제목하에 반미시위, 폭력좌경화 시위등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등 평소의 비판적 태도와는 달리 좌경화운동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동료 훈련병 현 00이 흡연장에서 "오늘 발표내용이 너의 진심이냐? 고 묻자" "절대로 아니다. 내가 그런 때에 말하는 것은 항상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주변의 동료 훈련병 3명에게 분단의 책임, 팀스피리트 훈련, 민중정부 등의 문제에 대해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였음

*'89. 4. 11-4. 23 간 훈련기간에 훈련병 김 00등 5명에게 자신의 좌경의식화 활동경력을 과시하고 자본주의의 모순, 현정부 비판, 사회주의 국가건설등을 선동하였음

*'89. 4. 23-19:00 경 00연대 군인 교회에 비치된 찬송가 여백에 통수권자와 정부를 모독하는 낙서와 구호, 자신의 편향적 견해를 기재하는 등 북한 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병영의식화"를 위해 암약하다 찬송가의 낙서를 추적함으로써 검거되어 군재에 회부되었음

(3)교훈

신병 훈련과정에서 약 15회에 걸쳐 동료 훈련병 20여명을 대상으로 반미반정부 민중정부 수립, 사회주의 국가건설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판적 언동을 하였으나 아무도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았음

다. 이적 표현물 제작사건

(1)개요

00사단 00연대 전투지원중대 방위병 000(27세, 연세대 대학원 국문과 졸)은 대학원 재학시 이념서적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좌경의식화되어 군입대후 김 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강철서신"을 제작판매하다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된 사건임

(2)주요 활동 내용

*'88. 11월 중순 군입대전 직장이었던 도서출판 눈대표 이 춘호로부터 잘 팔리는 좋은 기획물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김 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인 "강철시리즈"를 발간하면 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책자편집에 착수하였음

*'88. 12월 초 출판사 대표 이 춘호로부터 책자 편집에 따른 편집위원 구성 및 책자내용에 대해 일체를 위임받은 후 12월 중순부터 기존의 "강철시리즈"를 골간으로 하여 중국혁명과 모택동사상, 대학가 지하유인물들을 부분발췌하여 김 일성 주체사상 및 계급투쟁찬양 조직 및 투쟁방법등의 내용을 집필

*'879. 1월 중순 위 내용을 출판사 전산에 입력후 교정을 본 뒤 '89. 2. 16 용산 소재 성신 문화사에 의뢰 "강철서신" 5400부를 제작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군재에 회부되었음

라. 군내 좌경조직 구축 획책 사건

(1)개요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인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조직된 목원대 지하조직 "불꽃회"출신 00사단 방위병 000등 3명 및 0포병여단 상병 000등 현역 2명이 군입대 후에도 학내조직을 조종, 월 1회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시도 및 데모주동, 휴가시 학내시위참가 책동등의 불순활동을 계속하다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된 사건임

(2)주요활동사항

*방위병 000(00사)

- '88.1 입대후 조직원들과 월 1회 접촉후 조직보강, 학습지도, 조직 강령작성 지시등의 활동독려

- '88.10 김 일성 주체사상 학습용 유인물을 입수하고 주 1회씩 평양방송을 청취하는등의 사상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

- '88.12 초 김천소재 우창기업사(TV부품 생산업체)여공인 신 은숙(26세)에게 주체사상 유인물을 제공하고 학습을 권유했으며 또한 김천 성의상고 동창 박 인학(청주대 법학과 3)과 접촉, 주체사상 유인물을 학습 권유

- '89.1.23 흑한기 훈련중 증대장 000 대위와, 대화시 대한민국의 정통성 왜곡 및 북괴 찬양 등의 언동

- 구속후 조사과정에서도 공산주의자를 구속하려는 수사관이 불쌍하다고 언동

*방위병 000(00사)

- '88.8 입대후 조직원 4명을 월 1 회 접촉하면서 김 일성 주체사상 학습 및 북괴방송 청취를 권유

- '88.10 부터 야간근무시 증대장실에 비치된 라디오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평양방송을 청취하는 등의 주체사상학습 실시

- '89.1부터 동료 방위병 000등 5명을 조직원으로 포섭할 목적으로 자본주의 모순과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에 대한 언동을 하면서 접근하였으나 모두 무반응을 보여 포섭포기

- '89.4.29 육본에서 제작된 VTR 테이프(이상과 현실)가 운동권 학생을 비판하는 내용임을 알고 야간 근무시 VTR테이프 훼손

- '89.4.18 일직부관 하사 000과 대화시 "나는 공산주의자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노학 연계세력이 연합하여 북한과 타협, 남한내 제국주의 세력과 현 정권을 타도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언동

- '89.5.1 증대회식시 증대장 대위(진) 000이 자신에게 "전역후 판사가 되면 잘 봐달라"고 하자, 인민위원장이 되어 재판할 때 잘 봐주겠다함

5. 징후목록

구 분	징 후
1. 입대전 행적	가. 문무대 / 전방입소 거부 나. 학생운동 참여 정도 다. 가입씨클의 성격 라. 재학시 징계 성격 마. 장학금 수혜단체 성격 바. 사회 노조활동 참여정도 사. 불순 종교단체 가입
2. 좌익자료 유입	가. 자료 유입 급증 (1) 수량변동 시기(휴가, 외출, 외박, 복귀후등) (2) 우편물량(소포증가, 발송보다 수신 과다) (3) 발송기관의 종류(노조보, 학보 등) (4) 군사우편 사용기피(비공식 계통발송, 수신 기도) 나. 내용 위장 (1) 표지와 내용상이 *표지: 성경 내용: 좌익이론 *표지: 가곡(녹음테이프) 내용: 노동가, 운동가 (2) 특정내용만 부각시키기 위한 표식 *성경: 해방신학 인용구절만 언더라인 *외국신문 / 잡지: 국내시국상황 왜곡내용 복사 (3) 합법빙자 좌익활용 가능한 내용 *저항위주 극영화 비디오 테이프(사회상영) *AFKN, 심야토론 등 상습시청 (4) 좌익 / 북괴의 선동자료 *좌익 전위조직 발간자료 *북괴 살포 전단 비밀보관
3. 좌익세력 접촉	가. 휴가 / 외출 / 외박시 본가 미기거 (학교씨클, MT, 노조 등 참여목적) 나. 포섭대상자 외출 / 외박 동행유도(영외에서 의식화기도)

	<p>다. 면회</p> <p>(1)비정상적인 관계자 면회(연령, 직업, 신분 등)</p> <p>(2)면회시 전우동행 적극기피(좌익분자 면회목적)</p> <p>라. 공중전화 사용빈도</p>
4. 언행	<p>가. 부지불식간 좌익용어 사용(팃쇼, 미제, 용병 호상간 등)</p> <p>나. 사회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언동</p> <p>(1) 사회 모순점에 대한 비판 (재벌 / 고관 사생활, 달동네 생활상 등)</p> <p>(2)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제하면 서유언비어전파</p> <p>(3) 군가, 가요 가사 바꾸어 전파(운동가, 노동 등)</p> <p>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p> <p>(1) 대남 귀순자에 대한 비판적 언행 (귀순이유: 사생활, 금전문제로 격하)</p> <p>(2) 밀입북자 은연 중 찬양 / 탄압 부당성 강조 (문익환, 서경원 등 구속 부당 강조)</p> <p>라. 군에 대한 불평불만</p> <p>(1) 군내 부조리, 유언비어화 (진급 / 보직 / 평정시 금품 수수설 유포)</p> <p>(2) 군내 분열유도 언행 (지역 / 출신 / 계급간)</p> <p>(3) 불평불만자에 대한 적극 동조</p> <p>(4) 월북자에 대한 긍정적 측면 강조 (국군성격 왜곡 및 군내 부조리 이유 등)</p>
6. 좌익확산	<p>가. 비공식 조직 결성 기도</p> <p>(1) 종교행사시 간부참여 배제 요구 (성경공부, 기도회 등)</p> <p>(2) 과외시간 소집단 토론 기도</p> <p>(3) 학연 / 지연 등 연고 빙자, 조직 기도</p> <p>(4) 취미활동 이유 조직 기도</p> <p>(5) 자기 신상 허위기재, 보고</p> <p>나. 이상 선심행동</p> <p>(1) 능력 이상의 과도한 용돈지출 (동료 포섭용)</p> <p>(2) 야간 대리근무 자원 (대상 선별접근)</p>

<p>다. 적극적 행위</p> <p>(1)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군사기밀 수집기도 (작전 / 훈련 / 사고 등)</p> <p>(2) 불필요한 기록 과다 (수첩, 비망록 등에 타인이 알아볼 수 없는 음어 사용)</p> <p>(3) 군 민주화 필요성 강조 전파</p> <p>(4) 지시 이행 거부 분위기 조성</p>

6. 대비활동

가. 좌익분자 침투대비 활동강화

활 동	세 부 내 용										
침투징후 목록작성활용	<p>#자대 목록 작성 -부대임무, 위치, 환경 등 고려, 보안부대와 협조</p> <p>#부하관리를 위한 구체적지침으로 활용(지휘관용)</p>										
색출 및 차단	<p>#심도깊은 신상파악으로 개인의 사상성향에 대한 지휘 강화</p> <p>-신상파악 요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성장환경</td> <td>*가정적 배경 *교육적 배경 *지역, 사회적 배경</td> </tr> <tr> <td>개인특성</td> <td>*지능, 적성, 성격, 취미, 학력 *신체조건, 행동습성, 가치기준</td> </tr> <tr> <td>생활태도</td> <td>*내무생활태도 *교육훈련태도 *임무수행태도 *대인관계</td> </tr> <tr> <td>당면문제</td> <td>*가정문제 *신상문제 (건강, 이성, 부채, 인사 등)</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성장환경	*가정적 배경 *교육적 배경 *지역, 사회적 배경	개인특성	*지능, 적성, 성격, 취미, 학력 *신체조건, 행동습성, 가치기준	생활태도	*내무생활태도 *교육훈련태도 *임무수행태도 *대인관계	당면문제	*가정문제 *신상문제 (건강, 이성, 부채, 인사 등)
구 분	내 용										
성장환경	*가정적 배경 *교육적 배경 *지역, 사회적 배경										
개인특성	*지능, 적성, 성격, 취미, 학력 *신체조건, 행동습성, 가치기준										
생활태도	*내무생활태도 *교육훈련태도 *임무수행태도 *대인관계										
당면문제	*가정문제 *신상문제 (건강, 이성, 부채, 인사 등)										

<p>#병영내 비공식 사조직 파악 및 결성금지 -학연, 지연, 출신별 조직실태 파악, 대책강구 -취약지역 및 문제인원 생활실태 수시 파악 #불온서적 / 유인물 반입경로 분석</p>			
경로	휴가 / 외박 복귀시	면회시	우편
반입물	74%	17%	9%
<p>#통제대책 -위병근무 기강확립 : 부대 출입자 통제 (면회객 등) -우편물 점검체제 확립 -내무생활 지도 / 정신교육 -건전도서 확보 및 독서여건 조성 #대군 침투공작 감시 -외래 방문객 통제강화 -외부와 연계기도 파악 면회, 전화, 우편물, 기타</p>			
방 및 순화	<p>#오염자 발견시 개별면담 및 집중지도 -지휘관 / 정훈장교에 의한 면담 및 지도 #좌익 논리에 대한 비판적 자체토론회 개최 -이념무장 자유토론회 / 시극오염방지 토론회 실시 (월 1회 이상) #지휘관 중심의 기동성 있는 특별 정신교육 실시 -현안문제 발생 전후 적시적인 집중교육 실시</p>		

나. 군내 좌익 활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제재

- #군내 좌익행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 설정
- #군 형법에 대한 교육강화, 군인으로서의 대좌익관 확립
- 지휘관 시간 활용, 지휘관 직접교육
- 법무장교 순회교육 강화
- #위반시 이적행위로 강력한 제재

활동	세부내용
간부의 좌익 이론 비판 능력 강화	<p># 간부 이념무장 주제발표(주 1회) # 간부 이념무장 발표력 경연대회(분기 1회) # 간부 교육시 이념무장 교육을 최우선 실시 # 간부 능력 평가에 이념교육 능력 반영 * 이념무장 교육시 간부 열외인원 근절대책 강구</p>
시사성 있는 교육 자료 적시 지원	<p># 상급부대 제작, 이념교육자료 최대활용 -사령부 : 이야기 소재 (주 1회) 이념교육자료 시리즈 (수시) # 중, 소 대별 자체 스크랩 제작 활용</p>
자유 민주이념 전문강사 초빙 교육	<p>#주기적인 전문강사 초빙교육 실시 (분기 1회)</p>
자기 신념화 이념 교육 실시	<p>#자기 신념화 교육 기법 적용 -강의+시청각+발표/토론 #다양한 이념교육 활동 병행 -충성회, 퀴즈경연, 웅변대회, 단막극, 현장견학등</p>

라. 군기확립 활동강화

활동	세부내용
지휘계통 확립	<p>#상명하복의 생활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정신 습성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 금지 # 보고 체계 확립 -지휘계통에 의한 보고절차 준수 -최초, 중간, 최종보고 습성화</p>
제규정 이행	<p># 일과표에 의한 행사 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부에 의한 행사주관 -일일 결산제도 시행 -하급제대 일과시간 준수 보장 -간부 출근 및 근무자세 확립 -방위병 출, 퇴근 시간 보장 # 각종 신고제도 확립 -중대장 : 전입 / 전역, 휴가 / 외출 / 외박 -일직사관 (일과후) : 외출, 근무신고 #군 기본자세 확립 -지휘관 정신교육 강화 -간부 솔선수범 -제식, 군대에절, 두발, 용모, 복장 수시점검 #간부의 규정 / 방침 숙지 생활화 -지휘관에 의한 주기적 점검
--	---

하급제대위계질서 확립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병 기본권 보장 -여가선용 보장 (종교, 자유시간, 체육 등) -세심한 관심촉구와 공정성 제고 (의식주, 근무여건 휴가, 포상, 진급 등) -하의상달 통로 확대 : 의사소통 체제유지 #횡적조직 활성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중대장의 날</td> <td>소대장의 날</td> <td>분대장의 날</td> </tr> <tr> <td>주기</td> <td>반기 1회</td> <td>분기 1회</td> <td>월 1회</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사명감, 책임의식 고취, 사기양양</p>	구분	중대장의 날	소대장의 날	분대장의 날	주기	반기 1회	분기 1회	월 1회
구분	중대장의 날	소대장의 날	분대장의 날						
주기	반기 1회	분기 1회	월 1회						

불순분자 연계 및 이권개입행위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부에 의한 입체적인 신상파악 활동강화 #휴가, 외출 외박시 좌익세력 접촉금지 교육 #비정상적인 관계자 면회여부 수시파악 #공중전화 사용빈도자 파악
--------------------	--

마. 복지정책 추진

활동	세부내용
초급 간부 기본 복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신간부 숙소 개선 / 건립 -안정된 부대 근무여건 보장

강구	#규정에 의한 휴가 보장
계층간, 근무시간 상대적 소외지대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보수 / 정비 -화장실, 세면장, 목욕탕, 이발소 등 #휴게실 운영 활성화 -운전병 휴게실, 소부대 #격오지 부대 복지대책 강구

바. 인사 운영풍토 개선

- #인사제도 방침에 대한 부단한 교육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오해 및 불신해소 (계획인사, 평정, 보직 등)
- #합리적인 인사관리
- #공정한 인사경쟁 풍토조성

사. 합리적인 지휘관리

- #전문 직업군인 정신에 투철할 수 있도록 부하교육 및 관리
- 규정과 법규 교육강화
- 부대훈 (충성, 명예, 단결) 실천 생활화
- #의사소통과 계층간 갈등순화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
- 계급별 토론회, 간담회, 대화의 광장 활성화
- #법과 규정에 입각한 합리적 지휘관리 생활화

7. 군내 좌익활동에 대한 처벌 근거

가. 군내 좌익행위 및 이에 대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들 수 있고, 그 이외 군내에서 임의로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설정할 수는 없음 (단, 징계처벌은 예외)

나. 국가보안법상 나타난 좌익행위별 처벌근거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군내 좌익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동법 제 7조의 찬양, 고무 등 죄인²바 대법원 판결을 통한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단순찬양, 고무 등 (제 7조 제 1항, 제 2항)

반국가단체(북괴, 조총련)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인정한 사례

*성조기를 불태우며 한, 미 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본 유

인물을 배포한 행위

#6. 25 는 복침이라고 한 행위

*시중의 판매서적 중 불온한 부분만을 발췌, 의식화 학습교재로 쓴 행위

*북한의 선전내용, 투쟁방법 등을 익히기 위한 방송청취

-처벌을 부정한 사례

*흥분한 상태에서 국가원수, 정부기관을 욕하거나 "김일성이보다도 더한 놈", "우리 나라법이 빨갱이 법보다도 못하다"고 한 경우

*찬양, 고무 등 내용을 일기장에 적었을 뿐인 경우

*찬양 등의 낙서를 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을 뿐인 경우

#평소의 성향, 언동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1980년 국가보안법 개정 및 현재 대공산권 외교의 실정에 비추어, 복괴 및 조총련 등 복괴의 지시를 받는 단체이외의 다른 공산권 국가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경우에는 처벌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함

(2) 이적단체 구성, 가입 (제 7조 제 3항)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나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부정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허위사실의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의 왜곡, 전파 (제 7조 제 4항)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하는 것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의할 것은 본죄는 이적단체의 구성원만이 해당되고 일반인은 해당되지 아니함

(4) 이적 표현물 제작 등 (제 7조 제 5항)

#제 7조의 제 1, 2, 3,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됨 : 각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좌경서적 등의 구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조항이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함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연구나 지적인 호기심으로

구독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대학강사나 정치학과 출신 대학원 등이 공산주의 서적을 소지한 경우

-학문연구의 자료로서 공산주의 경제이론 서적을 소지 탐독한 경우

#그러나, 단순한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 이를 전파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가능함

-북괴의 대남 선전 활동과 일치하는 불온서적을 소지, 배포한 행위

-북괴의 대남선전, 사상교육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노트하는 행위

#이상과 같은 행위를 위해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 가능하며 군내 좌익행위 중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중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8.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경불순조직이 군내부에까지 침투하여 활동범위를 넓혀가게 된 이유는 입대장정의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대학 재학시 운동권의 영향을 받은 문제학생들의 입영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대부분이 소위 진보적 지성을 자처하며 운동권의 주의주장을 비판없이 무조건 수용하려는 의식성향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군 내부의 실상을 자성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직도 군 저변일각에 이들 불순세력에게 덜미를 잡힐만한 각종 비위와 폐습이 잔존하고 있는 데다, 이들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불우병사, 또는 문제병사로 인식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데도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들은 이제부터라도 군내침투를 기도하고 있는 불순세력의 본질과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의식을 드높여야 할 것이며, 장병들의 공감 속에 불순세력의 주의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이론 및 교육기법의 개발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는 하는 한편, 저변에 잔존하는 각종 부조리 요인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자세로 부대를 관리함과 아울러 매사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려하는 일부 소외계층의 순화계도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각별한 지휘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군 민주화는

자주, 민주, 통일의

선결과제입니다. 』